

중남미 국가의 대미의존도와 국방비의 관계 : 비대칭동맹 이론의 관점에서

김중섭(서울대 국제대학원)/
김종태(육군사관학교 외국어학과)*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와 가설
 - 1. 동맹딜레마에 관한 기존 이론
 - 2. FTA의 정치적·전략적 의미
- III. 중남미 국가의 대미 의존성
 - 1. 경제적 의존성
 - 2. 정치적 의존성
- IV. 중남미의 대미 자주성과 안보부담
 - 1. 중남미의 자주성 제한
 - 2. 중남미의 안보부담 감소
- V. 결론

I. 서론

최근 미국이 남미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확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남미, 카리브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남부군사령부의 마이클 물러 군사정책 고문은 최근 일부 남미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베

* Chong-Sup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chongsup@snu.ac.kr), Jong-Tae Kim (Korea Military Academy,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64kjt@hanmail.net), "Military Expenditure Tendency and Political Chang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ocusing on asymmetric alliance".

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국방비의 증가를 문제 삼았다. 각국의 군사비 증가가 주권확보 차원이나 국방 현대화를 넘어 지역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¹⁾

한편 중미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추세는 남미 좌파정권 국가들의 그것과 매우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이 지역 대부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군사비 지출비율도 남미 국가들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중미지역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크게 경제적 및 군사적 강대국은 없으나 각 국가의 다른 안보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추세가 대부분 지역별로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남미지역의 군사비 지출 증가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중미지역 또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군사비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미지역과 다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미 및 남미의 친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을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물론 현재 미국과 중미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군사동맹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인 대 테러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경제적 이유 외에 안보 및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살펴보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더욱 뚜렷해진 것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다룰 중심 질문은 과연 미국의 영향권 아래 존재한 국가들은 FTA와 같은 경제적인 영향과 정치적인 의존을 통해 군사비의 지출이 감소했으며, 안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작아지는 한편 자주성이 침

¹⁾ 전병근, 「남미 맹주 다름 군비경쟁 부르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20/2007092000078.html.

해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남미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멀어짐으로써 중미국가들에 비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가설은 미국과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의 군사비 지출은 감소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으로 외교 및 정치적인 결정의 자주성에 제한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경제적인 FTA를 체결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한 국가의 군사비는 증가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외교 및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비대칭 동맹과 관련하여 현재의 미국과 중남미지역 국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른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경제적 의존도와 군비지출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살펴보고, 계량적인 분석이 제한되는 정치적 의존도와 자주성의 제한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대상국가는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군사비 지출을 제공하는 중남미 17개 국가 중 현재 중미지역의 중미-도미니칸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The 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 6개국과 남미지역의 좌파정권이 등장한 6개국 총 12개국으로 한정하였다.²⁾

II. 이론적 논의와 가설

1. 동맹이론에 관한 기존 이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비대칭 동맹이론 중에서는 후견-피후견 국가 관계 모델과 안보-자주성 교환동맹 모델이 있다. 후견-피후견 국가관

²⁾ 코스타리카는 1946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고 군대를 폐지했으며, 파나마는 1990년에 군대를 시민군으로 대체했다. 쿠바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제외했다.

계에서는 자원의 흐름, 교환 등과 같은 사회관계의 형태가 주로 안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각 국가 행위자 사이에서 맺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한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의 ‘안보의 이전 (security transfer)’은 속성상 대개 후견국에서 피후견국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을 취하게 되며, 반면에 피후견국은 후견국이 주도하는 지역의 안보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교환관계는 공식적으로 안보동맹체제를 형성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양자간에 피후견국의 안보에 대한 기능적 분업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는 주로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고 동맹을 구성한 피후견국은 안보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국의 대외적인 정치 군사적인 자율성을 피후견국에게 비대칭적으로 양여함으로써 동맹관계에 있어서 하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Wendt 1989, 270).

안보-자주성 교환동맹 모델은 동맹을 맺을 때 발생하는 안보능력의 증진과 동맹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의 변화 정도에 관심을 갖는다. 대체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은 안보와 자율성이 불균등한 비대칭 동맹이 되기 때문에 약소국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가로 정치적 자율성이 희생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안보와 자주성의 상호 교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자율성의 상호 교환성은 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상대 국가의 의존성이 그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결정의 자주성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91, 916-920).

모로우(James D. Morrow)에 따르면, 국가들은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주요 요소들인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상, 물질적 기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의 증진을 추가하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이익과 권리의 교환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확보하고, 이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약소국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자주성 일부를 양보하고 그 대가로 강대국이 제공하는 군사 경제 원조 등 추가적인 안보이익을 확보하여 자국의 전체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Morrow 1991, 930-931).

이와 관련해서 비록 미국과 중미지역 사이에는 군사동맹이 성립하지 않지만 후견-피후견의 관계는 동맹차원을 떠나 국제관계에서 군사동맹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은 중미 6개국과 CAFTA-DR을 통해 결속되어 있고 최근에는 경제와 안보는 대외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관계는 충분히 후견-피후견 모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라크전과 관련지어 볼 때, 미국은 중미지역의 지지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4개국의 파병지원도 얻어냈다. 실질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동의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외파병을 결정한 데에는 미국과의 경제적·군사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그 파병의 규모가 크지 않고 연장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주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자주성 교환모델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미국과 중미지역의 국가 사이에는 군사적인 동맹이 없지만, 비대칭 동맹관계가 성립할 만큼 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 FTA의 정치적 전략적 의미

테러와의 전쟁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같은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의 리더 역할을 잠식하고 있으며,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는 이러한 불리한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국가들과의 무역자유화 속에서 “새로운 의지의 연합(New Coalition of the Willing)”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의회와 대통령 간의 이익조정과 같은 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대 테러 전쟁을 보완하고, 또 다른 다자적인 협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지역적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이러한 세계 경제의 추세를 조정해야 하며, 떠오르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략적인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냉전 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적극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양자간 혹은 지역적 FTA를 형성해왔다.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33개 국가들과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에 대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를 위한 지역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Cooper 2002, 2). 2002년 이래로 미국은 지역적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더욱 강화시켜왔다. 부시 행정부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태국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과 남아프리카 세관 연합과 FTA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10대 무역 파트너에 들지 못한다. 즉 FTA가 단지 경제적인 상호보완의 의미에서 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FTA 이면에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안보적인 요소도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FTA 체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 FTA로부터 차별적인 혜택을 받는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FTA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지원을 다시 확인하며, 체결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체제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그들의 포괄적인 정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FTA를 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큰 시장과 강력한 경제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뿐 아니라 군사적인 자신감의 기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미국외교 정책의 통합적인 구성요소였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무역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을 자유무역세계의 패권국 혹은 리더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에 의하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체제는 때에 따라 가장 발전된 국가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 개념은 패권안정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패권국가나 리더국가는 국제 경제 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뇌물의 사용, 경제적 제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Gilpin 2001, 97-98).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세계체제의 초강대국으로 FTA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전략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적인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Hansen-Kuhn 2000, 1). 미국정부는 FTA를 상업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유,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적인 가치를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사상적인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III.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성

1.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미국의 국회는 2005년 8월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칸 공화국)과 자유무역협정인 CAFTA-DR을 비준했다. 미국에게 CAFTA-DR은 2005년 한 해 320억불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량만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수준의 협정이며, 이것은 미국의 총 무역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에 반해 중미국가들의 대미 무역비중은 대부분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³⁾ 미국의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 50%의 국민들이 CAFTA-DR을 지지했으며, 39%만이 반대했다(Kull 2005). 경제적·안보적인 측면에서, CAFTA-DR은 미국과 중미 6개국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무역에서의 이득을 살펴본다면, CAFTA-DR 체결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CAFTA-DR을 체결한 중미 6개국은 2005년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약 170억불 이상을 구매할 정도로 미국에게는 이미 중요한 수출국들이며 이것은 미국 총 수출의 2%를 차지한다. 또한 CAFTA-DR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CAFTA-DR 체결로 서반

³⁾ 다음 기관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or US GDP(2007); World Bank for Central American and Dominican Republic GDP(2007); IMF for exports(2007).

구에서 미국이 장기적인 안보적·정치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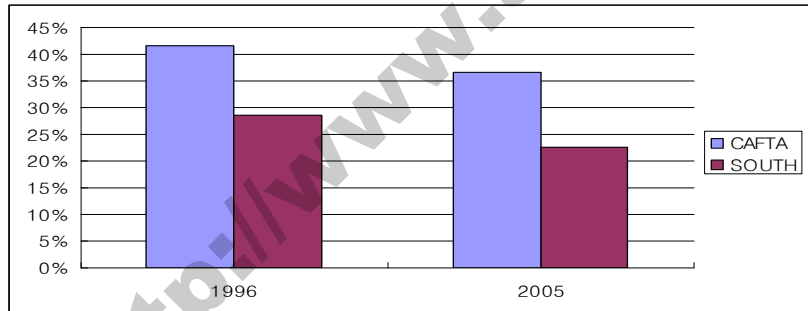
한편 최근 남미지역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은 중미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미 국가들과 CAFTA-DR이 체결된 것과는 달리 미국 중심의 FTAA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과 브라질이 북미와 남미의 중심국가가 되어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1차적인 목표시기였던 2005년까지 FTAA는 출범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장애요인도 산재해 있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급과 반덤핑 조치와 같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 대해서 남미의 국가들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또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FTAA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FTA와 관련된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의 우선적 접근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A를 통해 그들의 특권적 지위가 상실되는 것을 내심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반미주의를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는 반미동맹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을 중심으로 미국에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남미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LBA에 가입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자원을 활용한 선심성 외교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방어조약을 제안하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최신무기 구매를 통해 더욱 다자적인 외교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브라질은 베네수엘라만큼 반미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G-22)의 수장역할을 해왔으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 주도의 중남미 통합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미국이 남미에서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함께 FTAA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남미만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나 남미은행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IMF에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을 요구했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2007년 12월 남미 7개국이 모여 독자적인 남미은행(Banco del Sur)이 출범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은 CAFTA-DR 체결국과 남미국가들의 대미 무역의존도를 나타낸 것이다. CAFTA 체결국들은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무역의존도가 30-40%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중미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남미국가들의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는 중미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미국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또 남미 지역내의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20% 내외의 대미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 <http://comtrade.un.org>(2007)



<그림 1> 중미지역과 남미지역의 대미 무역의존도

2. 미국에 대한 정치적 의존성

미국의 안마당으로 불렸던 중미지역의 약소국가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경제적·군사적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미국 정부도 이들 국가들을 국무 홈페이지에서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2004년 체결한 CAFTA-DR을 통해 미국과 중미국가들과의 관계는 경제적·안보적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중미국가들의 정치적·군사적인 자주성은 더욱 제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로 아이티 사태와 엘살바도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94년 일어났던 아이티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1990년 선거로 선출된 민간대통령인 아리스티드(Jean Bertrand Aristede)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91년 쿠데타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국가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국제연합이 경제제재 및 외교적 중재노력을 실행하였으나 실패하게 된다. 1994년 국제연합은 아이티의 민정복귀를 위해 무력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승인한 ‘결의안 940’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30개국 총 2만2천명의 다국적군이 아이티에 상륙, 쿠데타 세력을 축출하고 아리스티드 민선 대통령을 복귀시키게 된다. 이후 아리스티드가 귀국하고 미국과 국제연합은 제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으며, 1995년에는 평화유지 임무를 국제연합의 아이티 파견단(UNMIH: United Nations Mission in Haiti)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미군 380명은 계속해서 1997년부터 1999년 3월까지 평화 유지 임무를 목적으로 아이티에 주둔하였다. 물론 군사적인 쿠데타에 대한 국제기구의 제재이지만, 그 중심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리스티드의 복귀 후에도 정세는 계속 불안했으며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2004년 초 권력에서 축출되었다. 그 이후에도 경찰과 불법 무장단체, 과거 군부 출신 파벌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계속되면서 2004년 6월 이후 약 9천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이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다. 사실상 계속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6년 10월 미국은 대 아이티 무기금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엘살바도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정부는 1979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Sandinista) 좌익정권 수립 이후, 엘살바도르 좌익 게릴라의 공세 강화로 내전이 강화되자, 중미지역 내 좌익혁명 확산 저지를 위해 대 엘살바도르 군사 및 경제원조를 대폭 증대시켰으며, 1992년 1월 내전 종식 후에도 엘살바도르 정부의 민주화 과정 및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6년에는 크리스토퍼(Warren Minor Christopher) 당시 국무장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전후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미국과 마약감시센터를 설립하고, 마약 감시 및 퇴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과 2002년의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진 피해복구 및 미국 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의 임시체류혜택 부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은 지진피해 복구로 1.1억불을 지원하고 임시체류기간 연장도 3차례나 혜택을 줌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는 이에 대해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단절함으로써 더욱 친미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 파병의 추가연장계획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지역에서 현재까지 이라크 파병군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아이티 사태와 엘살바도르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미에 대한 정치적·군사적인 개입과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이라크전쟁의 지지와 파병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수출을 증가시켰지만 한 편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켜 미국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카터(James Earl Carter Jr.)정부는 1977년 군사정권의 인권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남미지역에 첨단 군사무기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년 뒤인 1997년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행정부는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점과 군사장비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이 군사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금지에 대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의 뒷면에는 미국의 방위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측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국이 이 지역에서도 행사해 오던 억제력의 일부를 완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그 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던 현대화에 많은 남미국가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것

이다. 물론 미국의 첨단 장비들에 대한 수요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딜레마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중미지역과는 달리, 남미지역에서는 친미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개입이 크지 않았고, 성과도 미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 정권의 전복일 것이다. 미국은 반미 차베스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차베스는 다시 복귀하였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반미정책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미국의 영향력은 2000년대 들어 중미지역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남미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IV. 중남미의 자주성 제한과 안보부담 감소

1. 중남미의 자주성 제한

2002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2003년 이라크의 대량학살 무기를 근거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라크 침공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고, 파병에 대해서도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미지역 4개국의 이라크 파병이다.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크지도 않고 반군과 마약관련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미국의 전쟁인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파병을 결정한 것은 미국과 중미지역 국가들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하지만 그 파병의 성격과 연장파병 철회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파병을 결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주성이 침해된 결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국가보다 긴밀하고 경제적 군사적 원조도 많이 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테말라와 영세중립국인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미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중미 4개국은 파병을 결정하였다. 중미 국가들은 원래 ‘폴란드 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스페인 여단에 포함되어 나자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각각 380명, 도미니카가 300명, 니카라과가 100명을 파병했다. 과테말라의 신임 베르헤르(Oscar Berger) 대통령은 2004년 3월 6일 스페인에서 스페인과 중미 각국의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중, 과테말라도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언했다. 6일 후 마드리드 열차폭발 테러사건으로 과테말라의 파병계획은 무산되었지만, CAFTA-DR 체결국 중 영세중립국인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파병했거나 파병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소국들간의 ‘충성 경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남미에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국가들은 전체 33개국 중 7개국이었었는데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였다. 이 중 5개 국가는 무역협상이 체결되어 있었고,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20억불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3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차폭발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스페인은 이라크에 지원한 군대의 철군을 발표했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던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도 곧 철군해서 2005년에 완전 철군했다. 현재 엘살바도르만이 계속해서 파병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5년에도 우파인 안토니오 사카(Elías Antonio Saca González) 대통령이 재집권하여 380명 병력을 교체한 바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도 지난 8월 병력을 300명으로 감축한 상태이며 이라크의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감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중미 국가들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년 9월 부시의 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 동맹국을 언급하면서 이라크에 파병한 중미국가들 모두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미국과 중미국가들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후 남미지역 국가들의 반응은 중미지역과는 차이를 보였다.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한 국가는 남미 지역에서 콜롬비아뿐이었다. 콜롬비아도 사실 위치만 남미에 있을 뿐 우파인 우리베(Álvaro Uribe) 정권은 친미정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좌파정권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여러 차례 미국의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 비난했고, 브라질의 룰라(Luis Ing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의 파병요청도 거절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미국의 참전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반전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 칠레는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인정받을 수 없었고, 상임이사회 15개국 중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비교적 미국에 우호적이라고 보았던 칠레도 결의안에 기권이 아닌 반대를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은 효과적으로 남미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도는 있었지만 중미지역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의 등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예전의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던 남미 사회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원치 않는 결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만큼 안보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가입국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의 대 중남미 군사지원이 지난 3년간 대폭 삭감되었던 것도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미국과 미국시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자간 면책협약 체결을 거부한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사적 지원과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

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미국의 입지만 좁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6년 12월 미국은 2003년 제정했던 법안을 폐지하였고, 이 법률의 폐지와 함께 미 국방부는 중남미 11개국에 대해 군사훈련과 기술이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에는 남미 5개국(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과 중미지역의 영세중립국인 코스타리카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지원 재개는 중남미 내의 좌파열풍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좌파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고, 미국과 양자간 면책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칠레는 이미 2002년에 미국 군인 보호법안(ASPA: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 체결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주요 동맹국의 체결면제를 받아서 두 국가는 남미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남미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양자간 면책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은 양자간 면책협약을 체결했다. 명목적으로 양자에게 면책의 특권을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간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함일 뿐이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협약에 대해서 미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조차 체결을 거부했지만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중미지역의 약소국들은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군사비 지원이 40만 달러 삭감되어 해안의 경비활동과 마약운반 감시에도 지장을 받았다.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협약에 서명했다.

이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남미지역과 중미지역의 결정은 그들의 경제적·정치적 의존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미지역은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제적인 원칙을 따를 수 있었지만, 정치적·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미지역의 약소국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라크 전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 중남미의 안보 부담 감소

미국은 계속해서 중미지역에 대해 많은 경제적·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마약 거래와 같은 안보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⁴⁾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의 대부분은 외국군사자금조달(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나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에 의한 것이다. 외국군사자금조달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우방국 및 동맹국들간의 연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공동안보의 목표와 합동임무의 분담을 위해서 필요하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연합국가들에 대한 주요 지원도구이기도 하다. 국제군사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25개국 이상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군사적인 기본지식과 훈련을 제공한다.

〈표 1〉 미국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군사원조(FMF)

단위: 천달러

FMF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코스타리카	0	0	0	0	0	0
도미니카 공화국	649	350	300	973	992	941
엘살바도르	0	1,000	2,480	1,480	1,488	9,900
과테말라	0	0	0	0	0	0
온두라스	0	0	168	1,309	1,492	891
니카라과	0	500	1,000	779	496	594
아르헨티나	998	1,000	1,990	0	0	0
볼리비아	0	500	1,990	3,976	0	0
브라질	0	0	0	0	0	0
칠레	0	500	990	347	495	592
에콰도르	0	0	99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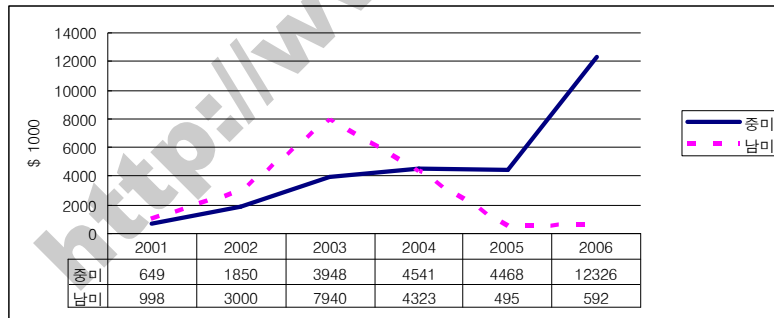
⁴⁾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2007), "Program Description", n.d, <http://fas.org/asmp/profiles/index.html>. 위 경로를 통해 군사지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였다.

파라과이	0	0	0	0	0	0
페루	0	0	990	0	0	0
우루과이	0	1,000	990	0	0	0
베네수엘라	0	0	0	0	0	0

자료: <http://www.fas.org/asmp/profiles/aid/aidindex.htm>(2007)

<그림 2>와 <표 1>은 최근 6년 동안의 CAFTA-DR 체결국 6개국과 남미 6개국의 미국의 군사원조 중 FMF의 수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남미에 대한 군사원조의 총액이 2003년까지는 중미지역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지만,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역전되어 2006년에는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중미지역에 대한 군사원조가 크게 증가했다. 이 변화는 양자간 면책협약(BIA: Bilateral Immunity Agreement)과 중미국가들의 이라크 파병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남미의 어떤 국가도 미국으로부터 FMF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미지역 대부분 국가들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료: <http://www.fas.org/asmp/profiles/aid/aidindex.htm>(2007)



<그림 2> 미국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군사원조(F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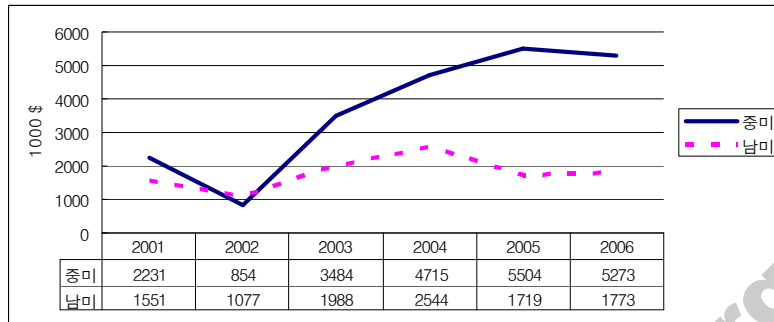
이는 FMF의 특성 과도 연관이 될 것이다. FMF는 앞서도 말했듯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우방국과의 연합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의 이라크전을 계기로 우방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과 같이 원조의 규모가 정해지는 FMF의 경우 2004년에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2002년에는 남미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규모가 50만 불 또는 100만 불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99만 불 또는 199만 불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정확한 계산이나 전략적인 필요성보다는 대략적인 계산에 의거 일괄적인 지원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남미국가에 대한 FMF의 지원은 중단되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양자간 면책협약을 거부함에 따라 미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일체 거부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남미지역의 국가들은 면책협약을 거부했다.

FMF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원조의 개념이지만, IMET는 간접적인 원조로 미래의 영향력을 보고 소프트 파워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IMET도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을 기준으로 중미지역에 대한 원조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남미지역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제외한 국가들의 IMET 원조는 2004년 이후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미지역에 대한 IMET 원조 규모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라크전을 계기로 남미의 다른 국가에 지원되던 원조를 모두 미국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집중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남미지역에 대한 군사 원조도 이라크전쟁을 기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IMET과 FMF 모두 2003년 이후 감소하거나 전혀 지원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미지역이 이라크 전쟁 이후로 군사원조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2002년 6월 부시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집단 동맹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⁵⁾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간 유지해 온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에 따라 동맹이 결정

자료: <http://www.fas.org/asmp/profiles/aid/aidindex.htm>(2007)



<그림 3> 미국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군사원조(IMET)

<표 2> 미국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군사원조(IMET)

단위: 천달러

IME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코스타리카	297	66	336	0	0	0
도미니카 공화국	513	87	570	973	1,194	1,085
엘살바도르	653	354	1,165	1,480	1,794	1,825
파테말라	0	78	89	174	444	488
온두라스	546	208	724	1,309	1,332	1,285
니카라과	222	61	600	779	740	590
아르헨티나	210	264	536	493	1,119	1,082
볼리비아	73	92	51	1,807	0	0
브라질	26	80	80	0	0	0
칠레	348	175	198	244	600	646
에콰도르	550	101	645	0	0	45
파라과이	38	48	31	0	0	0
페루	60	85	172	0	0	0
우루과이	127	171	202	0	0	0
베네수엘라	119	61	73	0	0	0

자료: <http://www.fas.org/asmp/profiles/aid/aidindex.htm>(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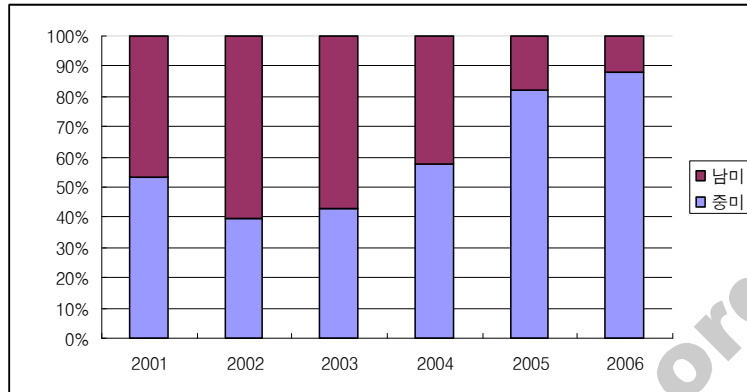
⁵⁾ 부시의 이 같은 발언은 2002년 6월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언급한 내용 중의 일부로 중앙일보 2003년 9월 26일자 신문의 “다시 그린 동맹 지도”라는 글에서 찾아 인용하였다.

되지, 동맹에 따라 미국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⁶⁾ 기존 동맹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는 ‘순환동맹’ 개념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신 미국의 단기적 군사목표를 지지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동맹지도를 바꿔 그리겠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중미지역과 남미지역의 군사원조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맛에 따라 음식을 고르는 ‘아라카르트(A La Carte)’식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의 입장과 시각만을 내세우는 ‘편의주의적 동맹관계(Coalitions of Convenience)’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통합을 이끌어내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이 지역의 국가들을 차별대우 함으로써 더욱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CAFTA-DR을 맺은 중미지역의 국가들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군사원조에 있어서 그 차이가 이라크 전을 계기로 뚜렷해진다. <그림 4>는 CAFTA-DR을 체결한 6개 국가들과 남미 6개 국가들의 군사원조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까지는 남미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11개 국가들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역전되어 2006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미지역에 대한 원조도 칠레나 아르헨티나에 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원조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⁶⁾ 미래전략연구원에서 2003년 10월 발간한 “오감도”에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실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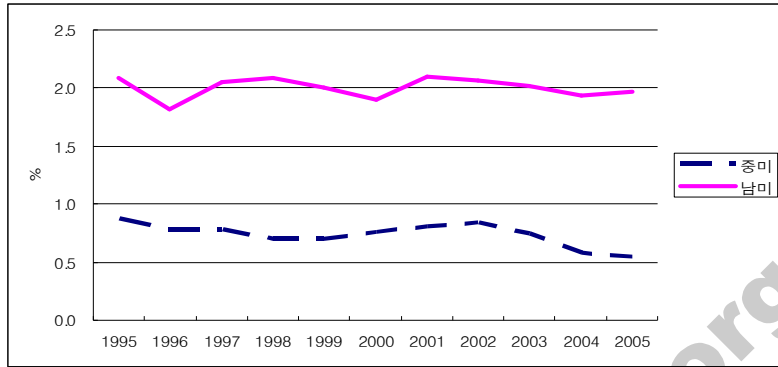
자료: <http://www.fas.org/asmp/profiles/aid/aidindex.htm>(2007)



<그림 4> 중미와 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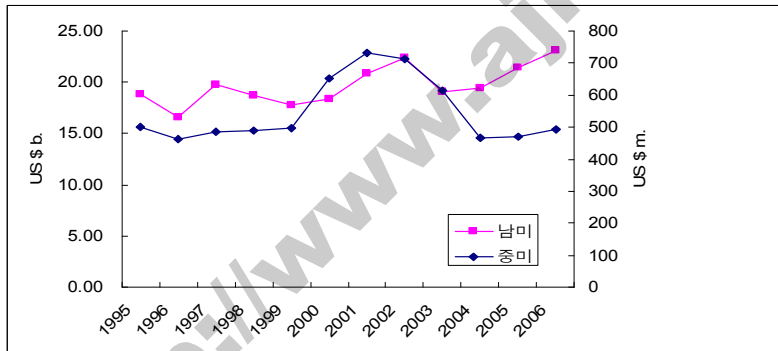
한편, 중남미지역의 군비 지출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는 CAFTA-DR을 체결한 5개 국가와 남미 6개 국가의 GDP대비 군비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미지역의 국가들의 평균 GDP대비 군비지출은 2%에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 CAFTA-DR을 체결한 중미지역의 약소국들은 1% 이하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 더욱 감소하여 0.5%에 근접해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에 반해 남미지역의 국가들의 군비지출 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최근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그 절대적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6>을 보면, 2002년까지는 중미지역과 남미지역 모두 군사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중미지역은 군사비가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미지역 국가들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료: SIPRI Yearbook(2006)으로부터 추정



<그림 5> 중미와 남미지역의 평균 GDP 대비 군비지출 비율

자료: SIPRI Yearbook(2006)으로부터 추정



<그림 6> 중미와 남미 지역의 군비지출

<그림 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CA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감소추세로 바뀌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3년과 2004년 사이 중미지역에 특이한 경제적인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GDP 대비 군사비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과 CA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과 미국의 군사적인 원조가 이 시기에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강

대국과 약소국간의 비대칭적인 의존관계와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중미국가들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필요성과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남미지역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요인으로는 국경문제, 불법 마약, 게릴라에 의한 안보 불안의 증가 등도 있다. 실질적으로 남미지역은 유일하게 지역 전체적으로 핵무기에 반대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없으며, 신뢰 및 안보 구축조치(CSBM: Confidence Security Building Measures)도 상당수준으로 발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미국가들은 뚜렷한 외부적 안보위협은 없으나 대외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대내적인 불안요소가 큰 편이다(SIPRI 2006, 255).

브라질은 전통적인 군사대국으로서 군사비 지출만 놓고 따졌을 때 10위권에 근접해 있으며, 최근 군사비 지출과 GDP 대비 군사비 지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브라질은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충분한 역지력을 보유할 것이며, 방위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반미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헬기나 잠수함과 같은 최신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며 이념적인 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고유가로 인해 오일달러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방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칠레는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군의 현대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또한 구리자원이 풍부한 칠레는 구리를 채굴하는 국영기업 이익의 10%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구리가격의 상승에 따라 꾸준한 군사비 지출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칠레는 가장 먼저 현대화된 군사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브라질의 군사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의한 남미지역의 경제발전도 이 지역의 군비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이 지역이 그 동안 국방계획에 의한 군사비 지출이 정권의 잦은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임기에 맞게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군사비

지출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군사비 지출이 증가되고, 군의 현대화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남미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감소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중미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남미지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적으로 최근의 좌파정권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첨단 군사무기 도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시킨 것이 오늘날의 군비증가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인해 남미 국가들이 군 현대화를 자신의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도 군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군사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그만큼의 비용이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다. 2000년대 남미지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뚜렷한 군사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정치지형학적으로 더욱 멀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V. 결론

중미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아직도 경제적인 발전이 미흡하다.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지속적인 정치개입은 그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대부분의 CAFTA-DR 체결국가들은 이라크 지역에 파병했으며, 그 이후 미국의 군사적인 원조가 이들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미국과 중미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이들 국가들의 파병이 한번만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면책특권협정에 대해서도 피동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때, 비대칭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약소국들의 안보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자주권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남미의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국영화를 통해 남미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으로 먼로 독트린과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특히 미국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좌파정부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게다가 클린턴 정부는 카터정부가 중남미에 대해 실시했던 첨단무기 금수조치를 완화시켰다. 이것은 미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딜레마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최근 남미 국가들은 군사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뚜렷한데, 그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CAFTA-DR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체결되었으나, 남미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를 거부하고 있다. 남미 국가들은 그들만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항해서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CAFTA-DR 체결국가들의 절대적인 군사비는 약간 증가했지만, GDP 대비 군사비는 최근 감소하고 있다. 남미국가들은 그에 반해 경제발전과 군사 현대화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도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Caribbean region can be distinguished by their military expenditur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members of Central America and leftist countries of South America is very obvious. This difference is mainly created by the existence of an asymmetric alliance. Although there is no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AFTA-DR

contracting countries, the relationship has a characteristic of asymmetric alliance with high rate of dependencies of CAFTA-DR members on politics and economy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dependency on the U.S. of weak and small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is relatively hig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whereas the dependency of South American countries has declin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leftist governments. Consequently, such political and economical dependencies of CAFTA-DR members reduce the security burden on the one h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y are subject to restriction by the U.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decisions. In contrast, the security burden of the South American countries is rising, but they have the liberty of choice in their political decision making.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thesis examines the economic dependency by studying the trade dependency and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It also looks at the political dependency by reviewing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the U.S. and the ban on high-tech arms importation in Latin America. This thesis also investigates the security burden through military expenditure of each countries as well as the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is thesis seeks to study the limited authority through the scale and characteristic of the troop dispatch and response on the War in Iraq and the patterns of participa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f those countries.

Key Words: Military Expenditure, Military Assistance, Asymmetric Alliance, Security Burden, Authority Restriction / 군비지출, 군사원조, 비대칭 동맹, 안보부담, 자주성 제한

논문투고일자: 2008.09.24

심사완료일자: 2008.11.14

게재확정일자: 2008.11.17

참고문헌

- Cooper, William H.(2002), “Free Trade Agreement: Impact on U.S. Trade and Implication for U.S. Trade Policy”, April 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Gilpin, Robert(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nsen-Kuhn, Karen(2000), “Bush Trade Policy: The NAFTA Express: A Global Affairs Commentary”, *Foreign Policy in Focus*, <http://www.fpif.org>.
-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annual](1998-2007), *Military balance yearbook*, London: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 Kull, Steven(2005), “American on CAFTA and US Trade Policy”,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http://www.pipa.org>.
- Ministerio de Defensa de la República de Bolivia(2004), *Libro blanco de defensa*, La paz: Ministerio de Defensa de la República de Bolivia.
- Ministerio de Defensa de Nicaragua y Ejército de Nicaragua(2005), *Libro de la defensa nacional de Nicaragua*, Managua: Impresión Comercial La Prensa.
- Ministerio de la Defensa de El Salvador(1998), *La nación salvadoreña: Su defensa, seguridad y desarrollo*, San Salvador: Ministerio de la Defensa de El Salvador.
- Ministry of Defense of Argentina(1999), *White Book on National Defense*, Buenos Aires: Ministry of Defense of Argentina.
- Ministry of Defense of Brazil(2005), *National Defense Policy*, Brazilia: Ministry of Defense of Brazil.
- Morgenthau, Hans J.(198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Morrow, James D.(1991),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p. 904-933.

Secretaría de Defensa Nacional de Honduras(2005), *Libro de la defensa nacional*, Tegucigalpa: 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de Honduras.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annual](1997-2007), *SIPRI Yearboo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Wendt, Alexander(1989), “The States System and Global Militariza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http://www.ajlas.org>